여야, 핵심 쟁점 법안 본회의 처리 '전운'

채상병·방송법, 김홍일 탄핵안 등 '强대强' 대결 예고
與 '거야 입법폭주'…"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배수진
野, '6월 임시회' 처리 의지 확고…대정부질문도 강공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원(院) 구성을 마쳤지만 핵심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놓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은 물론, 방송 지배구조와 직결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원구성 이전 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는 점에서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한편, 본회의에서마저 강행 통과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에는 진실규명이 아닌 윤석열 정권 흔들기 의도가, 방송3법에는 야당의 방송 장악을 통한 차기 정권 탈환 목적이 기저에 있다면서 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하는 여론전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왔다가 폐기된 바 있다. 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다시 꺼내 든 것은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와 상관없이 170석,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할 경우 182석인 '의석수'를 앞세워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은 물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관철시킬 태세다.

변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이들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는 합의하지 않은 탓에 우 의장으로선 일단 최대한 협상을 중재한 뒤 '결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을 늦어도 7월3일에는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6월 임시회 마지막 날(7월4일)에도 본회의가 잡혀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경우 회기 종료로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첨예한 대치는 7월2일부터 사흘에 걸쳐 진행되는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한 야당의 일방적 공세를 차단하는 한편, 대정부질문을 야권의 '입법 독주' 부당성을 알리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밖에 없는 법안을 전부 통과시키고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본회의 강행 처리 법안을 중심으로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핵심 공략 포인트로 잡았다.

정진욱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순직해병 수사를 은폐한 주범이 누구인지 밝히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을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에서 김원이 의원(목포) 1명이 대정부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인철, '지방교부세율 5%p 인상 법안' 발의

지방재정 확충 위해 19.24%→24.24%로 인상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사진)은 30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현재보다 5%p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18년 간 단 한 차례의 인상 없이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지출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광주시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2018년 1조6천885억원, 2020년 2조1천808억원, 2022년 2조6천229억원, 2024년 3조36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도 2018년 37.3%에서 2024년 44%로 늘었다.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늘어난 만큼 타 분야에 대한 지출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올해 기준,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제외) 규모는 61조6천948억원(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이었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77조7천277억원으로 약 16조원 증가하게 된다.

조인철 의원은 "시대적 소명인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22대 총선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공약했었다"며 "법안 발의를 통해 18년째 제자리인 지방교부세율을 현실화해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민주 '확대명'…최고위원 10여명 '明心 경쟁'

전대 흥행 부진 우려↑…최고위원 경선으로 '컨벤션 효과' 기대감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도전을 가로막겠다는 대항마가 없는 가운데 경선룰에서도 권리당원 영향력이 대폭 확대되면서 8·18 전당대회가 일찌감치 '이재명 독주 체제'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으로선 최고위원 경선을 통해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처지다.

마침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출범과 맞물려 그간 '출마 타이밍'을 엿보던 원내외 인사들이 속속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30일 현재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는 재선 강선우·김병주·한준호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등 4명이다.

김민석(4선)·전현희(3선)·민형배(재선)·이성윤(초선) 의원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전·현직 의원만 8명에 달한다. 김지호 부대변인, 박승원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등 원외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후보군이 10명을 훌쩍 넘어가면서 당내에서는 최고위원 선거가 그나마 전당대회 흥행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엿보인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9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으로 8명을 추려 본경선을 치른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고위원 후보군이 죄다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이라는 점에서 드라마틱한 연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후보자들이 앞다퉈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 마케팅'에만 골몰, 차별화 경쟁이 자취를 감추면서 여론의 주목도도 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다. /연합뉴스

정준호 '공공서비스 국가책임 강화법' 발의

"지자체 시행 운임 감면 제도, 세대 갈등 소재 몰면 안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사진)은 30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도시철도법'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철도 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 목적 등을 위해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감면액 등에 대해 정부가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도시철도 운영자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철도시설 유지보수 및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소극적으로 나서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우리나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이나 공공 목적을 위해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되고 결국 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감면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국가의 부담과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왔다.

정준호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정책과 공공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임 감면 제도를 세대 갈등의 소재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법안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들이 많이 발의돼 사회 약자들이 국가로부터 따뜻하고 두텁게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QR코드 :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 원]	비고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23타경 5714	2	광양시 광양읍 인서4길15-9, 시동 2층 201호 78.84㎡	연립주택	60,000,000 60,000,000	
2023타경 57739	1	광양시 광양읍 덕례길62, 4층 401호 [우성연립주택] 65.20㎡	연립주택	68,000,000 68,000,000	2023타경4636 [중복]
[대지/임야/전답]					
2023타경 3541	1	광양시 광영동 802-19 297.6㎡	대	282,720,000 282,720,000	2023타경4599 [중복]
2023타경 5653	1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622-9 702㎡	답	123,552,000 123,552,000	
2023타경 5660	1	여수시 남면 두모리 848 546㎡	전	55,650,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849 1309㎡	전	55,650,000	
2023타경 5714	1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549 235㎡	전	16,450,000 16,45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지상수목포함
2023타경 5783	1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414 3174㎡[현황:전]	임야	258,868,000	일괄매각.목록1현황전으로이용중
		동소 산414-3 4661㎡	임야	258,868,000	
2023타경 5844	1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131-5 654㎡	전	336,101,000 336,101,000	일괄매각.목록1,3~7농지취득자격증명요.건축물[사찰]신축공사중.목록2~5건축허가내역존재.컨테이너,판넬조립식건물,이동식화장실.목록2지상의건물[모정]매각제외
		동소 129 1270㎡	종교용지		
		동소 130 418㎡	답		
		동소 131 861㎡	전		
		동소 131-1 427㎡	전		
		동소 131-2 257㎡	전		
		동소 131-4 179㎡	전		
		동소 산359 2034㎡	임야		
		동소 산359-3 46㎡	임야		
		동소 산359-2 115㎡	임야		
2023타경 54310	2	여수시 소호동 산65 8033㎡[공유자황남순 5719/8033지분.경계복원측량요.맹지]	임야	177,289,000 177,289,0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2023타경 60209	1	보성군 복내면 봉천리 769 1187.1㎡	전	68,804,200 68,804,2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767 1793.3㎡[지상제시외수목포함.문화재보호구역]	전		
2023타경 60742	1	구례군 간전면 금산리 산64 3968㎡	임야	99,200,000 99,200,000	경계복원측량요
2023타경 61295	1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산81 18180㎡	임야	72,734,400 72,734,400	일괄매각
		동소 산82 509㎡[토지예분묘소재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임야		
[아파트]					
2023타경 5905	1	순천시 둑실5길25, 106동 7층 701호 [조곡동,금강메트로빌] 84.6737㎡	아파트	136,000,000 136,000,000	
2023타경 6021	1	광양시 광양읍 서산길43, 106동 6층 602호 [수시아아파트] 84.8724㎡	아파트	249,000,000 249,000,000	
2023타경 60322	1	순천시 장승길40, 102동 9층 904호 [조례동,현대아파트] 72.07㎡	아파트	139,000,000 139,000,000	
2023타경 60568	1	여수시 시청로84, 3동 9층 906호 [선원동,금호아파트] 72.85㎡	아파트	187,000,000 187,000,000	미납관리비 742,360원
2023타경 60810	1	순천시 비봉2길22, 102동 10층 1006호 [조례동,시대아파트] 37.388㎡	아파트	61,000,000 61,000,000	
2023타경 60933	1	여수시 봉계대곡길62, 103동 13층 1302호 [봉계동,대광오투빌] 59.9930㎡ 토지별도등기있음	아파트	129,000,000 129,000,000	미납관리비 370,000원
2023타경 61059	1	순천시 서면 배들이길17, 101동 4층 407호 [선평배들마을주공아파트] 51.95㎡	아파트	91,000,000 91,000,000	미납관리비 1,522,790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3타경 60087	1	고흥군 풍양면 봉양상봉길 30 단층 39.7㎡[현황:함석기와지붕] 제시외 창고등90.85㎡	주택	36,737,890 36,737,890	일괄매각.제시외건물및수목포함.경계측량요.제시외건물일부인접필지위치
		고흥군 풍양면 봉양리 424-1 271㎡[현황:일부도로]	대		
2023타경 60506	1	여수시 충무동 1-5 34㎡	대	20,549,000 20,549,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경계측량요
		여수시 군자2길 9 단층 27.0㎡[현황:스레이트지붕위함석지붕] 제시외 주택일부등16.7㎡	주택		
2023타경 60629	1	순천시 상사면 홀산리 339 245㎡[공유자윤혜숙1/4지분] 제시외 창고등46.3㎡	대	47,152,580 47,152,58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매각지분해당제시외건물및수목.태양광설비매각포함
		순천시 상사면 당촌길 9 단층 97.56㎡ 부속건물 단층 창고32.76㎡[현황:주택및창고][공유자윤혜숙1/4지분] 제시외 태양광설비1*1/4㎡ 수목	주택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3타경 61233	1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479 499㎡	대	394,646,400 394,646,400	일괄매각.수목포함
		여수시 소라면 궁항길 115-1 단층 99.6㎡	근린시설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4. 7. 15.[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4. 7. 22.[월] 16:00

4. 매각장소 : 순천지원 제108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4. 7.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윤지연

CMYK